

☉ 대학 설립 기준 강화

2003학년도부터 대학정원이 수험생을 초과하는 대학정원 역진시대'로 진입하면서 대학 설립 시 기존의 준칙주의가 강화되고 재산출연자의 육영 의지가 엄정한 심사를 받는 등 대학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 설립 규정 강화 및 정원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의 자율정원 책정 기준이 내년 중 정원대비 교원·교사 확보율 80%, 2005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된다. 또 대규모 미충원 대학은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구조조정 우수대학은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약대 6년제 추진 실무위 구성

약대를 6년제로 교육 연한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약발특위, 위원장 김창중)는 약학 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전체회의에 최종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9월 20일 밝혔다. 약발특위는 그동안 산하 약사제도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 9월 18일 공청회를 가졌으며, 공청회 참석자들이 '약대 6년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약대 6년제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논의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부처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전체 회의에서 안을 확정된 후 ▲내년 3월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한 추진 실무위 구성 ▲2005년 6년제 일부 대학 시행 ▲2007년 모든 대학 시행 등의 일정으로 이를 추진키로 했다.

☉ 내년부터 비인기 과목 전공의에 월 50만원 수당 지급

내년부터 국립 병원과 특수법인 병원의 일부 전문과목 전공의에게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19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서울대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병원경쟁력 포럼' 초찬강연에서 "전공의 정원의 단계적 감축으로 전문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과목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과목별 전공의 정원 및 건강보험 상대가치수

가 조정을 통해 안과와 피부과 등 인기과는 줄이고 병리과, 방사선과 등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진단방사선과와 병리과, 응급의학과 등 10여개 선호도가 낮은 전문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내년부터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부터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될 수련보조수당 예산으로 15억 원이 책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내년 이공계 대학생에 대규모 장학금

청소년 이공계 진학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총 309억 원의 장학금이 대거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30일 내년에 이공계 학부생, 대학원생 4,300명을 선정, 1년치 등록금에 해당하는 1인당 500만원씩 총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2003학년도 학부 신입생 위주로 성적이 우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대학원생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생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을 실시, 총 2만2천 명을 대상으

로 9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이자액 9.5% 중 4.25%를 정부가, 나머지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대학생 학비 융자사업 방식과 달리 이자액 전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 된다. 교육부는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 11월께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방식과 대상, 절차 등을 결정, 공고하고 일선대학과 교교에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장학금 중 일정액을 지방대에 할당, 지방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학부, 대학원생 약 300명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고 국내 대학원생 700여 명의 해외연수 지원과 박사후과정생 지원 등을 위해 29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는 해당지역 교대총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맺어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을 교대에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해당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월 6일 KBS-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교대 졸업생의 부임 기피와 현직교사의 사직 등에 따른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원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남과 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8개도 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 지역은 전남과 강원을 포함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도 지역으로 교육감 추천자 예상 규모는 경기도는 200명, 나머지도는 각 100명 정도씩이다. 이미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전남도는 80명(신입 40명, 편입 40명)을 교육감 추천 특별전형으로 광주 교대에 입학시켜 월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4년간은 전남도내 초등학교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2002학년도에 2,777명, 2003학년도에 6,722명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게 되지만 2004학년도부터는 2,594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他교대 - 非 사범대 출신

교직 문호 넓어질듯

2003년 12월에 실시되는 2004

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의 15%를 차지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해 오던 가산점이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교대 출신자나 사범대 출신자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점도 상당폭 줄어 다른 지역 교대 출신이나 비사범대 출신들에 대한 교직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4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10월 중 공포해 1년간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임용시험 가산점은 대부분의 시도가 15점으로 초등학교사의 경우 동일지역 교대 출신에게 5~8점, 국가유공자 2~3점, 토골 등 어학점수 1~5점, 정보 및 컴퓨터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1~5점 등을 주고 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사범대 졸업자에게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1~5점, 어학점수 1~5점을 주고 있다.

● 이공대 여학생 비율 높으면 연구비 지원 우대

앞으로는 여학생 비율이 높은 이공계 대학은 정부로부터 연구

비를 지원 받을 때 유리하게 된다. 또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쓰이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여성과학기술담당관이 임명돼 이공계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10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각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진학 비율을 점검해 비율이 낮은 대학에는 여학생 충원을 권고하고 비율이 높은 대학은 연구과제 선정에 따른 연구비 지원시 우대할 수 있다. 또 5년마다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게 된다. 파기부 관계자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적극적 육성은 여성 인력의 활용과 이공계 위기 극복 대책 마련은 물론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진흥기금

70.3% 증액

정부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올해보다 70% 이상 증액키로 했다. 기획에

산처는 10월 14일 과학콘텐츠 풀 구축,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사업, 과학위성방송 운영 등 이른바 '과학문화창달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올해 91억 원보다 70.3% 늘어난 155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과학 발전의 토대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과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학콘텐츠 풀 구축 사업은 TV를 비롯한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신문, 잡지 등 활자매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급할 각종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과학 콘텐츠의 수요·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미디어 리소스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4억 원에서 내년에는 50억 원으로 12배 이상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이 이공계 진출 촉진 사업은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의 4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남고 싶은 스타 과학자 프로그램', 이공계 과학기술인의 모교 방문 강연을 지원하는 '사이언스 앰배서더 운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밖에 국민들에게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위성방송사업',

'인터넷을 통한 과학문화 사이트 운영 지원', '과학문화행사 활성화 사업' 등에도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 대학 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 자산의 총아로 여겨지는 대학 도서관이 교수와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대학내 핵심시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에 걸쳐 428개에 이르는 대학 도서관을 산학협력과 지역사회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최선의 지식정보 유통과 활용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정책지원이 따를 전망이다. 교육 인적자원부 황호진 정책분석과장은 10월 15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 도서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대학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같이 말하고 '도서관이 대학의 핵심기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를 위해 △대학 도서관 기능 확대와 강화, △교육·학술연구 정보자료 확충, △도서관간 연계체제 구축, △산학협력 및 대학 지역사회 협력 거점 육성, △관련 조직 및 인력 등 행·재정지원 강화 등을 대학 도서관 활성화를 위

한 교육부 5대 목표도 제시했다.

☛ BK21 중간평가 결과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중간평가한 결과 서울대 2개, 숭실대 1개, 충남대 1개 등 모두 4개 사업단이 성과 부진으로 중도 탈락하게 됐다. 특히 서울대는 모집단위 광역화나 학부 정원감축 등 제도개혁 실적이 미흡하고 일부 사업의 성과도 부진해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사업단 중 10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10~20%씩 삭감 당했다. 또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는 별도로 서울대 본부는 제도개혁 미흡으로 교육개혁지원비의 50%인 35억 원을 삭감 당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원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매년 2천억 원씩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BK21 사업의 초기 3년간('99.10~2002.2) 실적을 중간평가해 10월 18일 발표했다. 3년간 투입된 지원금은 6,685억 원으로 남은 4년간 약 8천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48개 사업단) △인문·사회(20개 사업단) △지역대학육성(42개 사업단) △특화(12개 사업단) 등 4개 사업부문에 참여한

122개 사업단 중 인문사회분야의 4개 사업단을 협약해지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부진사업단은 최대 25%까지 사업비를 삭감해 우수사업단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탈락사업단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21세기 행정학 패러다임교육연구단 △숭실대 E형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교육연구단 △충남대 백제학교육연구단으로 이들은 올 2학기 사업비 20%를 깎이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못 받는다.

☛工大 '패스트 트랙'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추진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에 5년제 학·석사 연계 과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이병호 산업기술국장은 10월 18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연세대 주최로 열린 '사학발전과 기술인력 확충' 토론회에서 "공대에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불리는 학·석사 연계과정은 5년만에 학사와 석사학위를 모두 획득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아화여대, 영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 실시 중이며 최근 연세대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간에 해석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 교대, 유아·특수교육과 720명 증원

교육대학과 4년제 대학 유아·특수교육과의 내년 정원이 올해보다 720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25일 교대 160명, 유아교육과 325명, 특수교육과 235명 등 총 720명을 늘리고 일반 사범계학과는 정원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2003학년도 교육대·사범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1개 교대, 79개 사범계대의 입학정원은 18,880명이 된다.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교대는 부산교대(50명 증원), 광주교대(35명), 전주교대(35명), 제주교대(20명), 춘천교대(10명), 진주교대(10명) 등 6개로 이에 따라 교대 정원은 올해 5,065명에서 5,225명이 된다. 교대 증원 규모는 지난해의 120명보다 다소 늘어났다. 유아교육과는 13개 지방대에서 325명이 늘어나 지난해

(189명)보다 증원규모가 대폭 커졌으며 주로 일반학과나 사범계 학과 정원을 줄이고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거나, 일반학과를 유아교육과로 전환한 경우이다. 유아교육과가 신설되는 대학은 여수대(15명), 창원대(20명), 경동대(30명), 대구가톨릭대(30명), 동양대(30명) 등이며, 일반학과를 유아교육과로 전환하는 대학은 계명대(30명), 서울신학대(30명), 위덕대(20명), 인제대(30명) 등이다.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 교원 수요 증가와 교원 질적 수준 향상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해 265명을 늘린 데 이어 올해는 14개 대에서 235명을 늘린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교대를 제외한 유아·특수교육과의 증원은 기존의 일반계 학과 정원 감축분을 활용한 것으로 사범계 학과의 정원 수준은 27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인교대 내년 9월 착공할 듯

경기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가칭 경인교육대학교(이하 경인교대)의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개 업체가 참여한 경인교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입찰에서 14억 7,360만원을 응찰한 (주)정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대표 김정철)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를 내년 8월까지 완료한 뒤 9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월 5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대학이 들어설 부지인 안양시 석수동 6의 8 일대 20만㎡(66,000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안양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 최종 대학부지로 결정키로 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대학 명칭에 대해 인천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로 명칭 변경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